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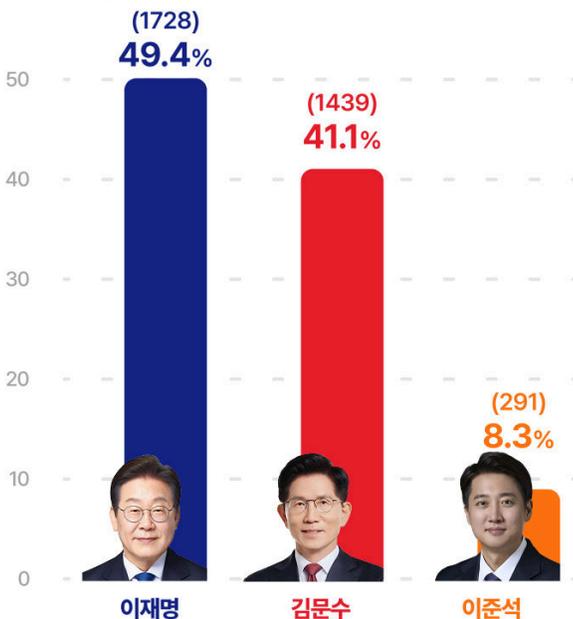
1. 이재명 당선과 대선 결과

CODIT
An Insight Agent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 06.04 오전 05:02 기준

단위: %(만 표)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실시된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7,287,513표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로 그 뒤를 이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로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하였다.

이날 투표율은 79.4%로 20대 대선 투표율(77.1%) 보다 2.3%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율 상승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 국민투표율(79.5%)과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사전투표율(34.74%) 등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및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도 동서 간 정치적 구도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2. 대선의 주요 변수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정국은 선거 구도를 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지만, 집권여당 출신인 김문수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지속된 당내 갈등과 단일화 논란 등이 선거 유세기간 내내 지지층 결집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 심리:**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강한 정권교체 심리가 전반적으로 지배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공판, 탈당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분열 등이 구여권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활동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다.
-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 보수 진영은 공식 선거 운동 직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총독에 이어, 선거 유세 기간 막판에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되며 보수 결집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선거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보수표의 분산을 초래했다.
- **후보 발언 논란:** 이준석 후보의 방송토론 발언이 선거 후반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각 당의 외연 확장 전략 차이:** 민주당은 진보 및 중도층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 전략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선거 흐름은 이재명이 앞서고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중간과 약세를 보이는 '1강 1중 1약' 구도로 진행되었다. 1·2차 TV토론 직후(24일경)에는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일시적으로 좁혀지기도 하였으나, 보수 진영 후보들이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앞으로의 정국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국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더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환경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 기조인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개혁’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내 확고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을 선도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내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 속에 당의 혼란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실질적인 야당 역할 수행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은 일정 기간 동안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야권 재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당의 우세한 의석 구조는 당·정·청 간 공조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에 따라 정책의 다양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중도 및 무당층의 정책 감시,



시민사회·전문가 집단·언론 등 비정파적 견제 세력의 역할이 정국의 포용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4.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핵심은 무엇일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 민주주의 복원, 사회통합, 통상·외교 재정비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개시되면서, 국정 과제의 설계와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초기 혼선과 정책 일관성 저해 우려가 병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재부 재편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국무총리·내각 인선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철학과 국정 운영방식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생경제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 성장엔진을 재가동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후보 시절 기업 관련 주요 공약에 기초하면, 새 정부는 ▲청년과 민생 중심의 포용적 경제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AI·반도체 산업 중심의 신산업 전환 ▲지배구조 개편 등 공정경제 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산업, 청년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는 조기 입법과 예산 투입이 예상되며, 이는 성과 중심 초기 정국 운영 전략과도 맞물린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소통채널 복원으로 코리아 리스크 해소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등으로 경제안보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산·AI·반도체 등 미국과 첨단 산업 협력 확대 등 공급망 외교 역시 신정부 초기부터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정기조는 신정부의 조기 성과 창출과 정국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조직 안정성과 국회 협조 여부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분야별 주요 정책>

분야	주제	주요 내용
경제	AI 산업 육성	민간 100조 투자 유도, AI 인프라·인재 집중 지원
	공정경제	지배주주 견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청년 지원	청년미래적금, 학자금 대출 조건 완화 등
노동·복지	노동권 강화	하청노동자 교섭권,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장기적 주 4일제 목표로 근로시간 감축
	정년 연장	고령화 대응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플랫폼 노동 보호	특고·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외교·통상	한반도 평화	남북 소통채널 복원, 코리아 리스크 해소
	경제안보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공급망 외교	조선·방산·AI·반도체 등 미국과 첨단 산업 협력 확대

5. 신정부 출범,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한 입법 추진력과 예산 집행력을 확보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영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핵심 정책의 입안과 예산 편성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 수준의 조정이 아니라, 산업별 세제·인센티브 구조, 노동규범, 기술 인프라 지원 정책 등 기업의 운영 모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은 2025년 하반기 국정과제, 예산 편성 및 확정, 국정감사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1) 정책 환경 종합 분석과 기업 대응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기업 대응 포인트
정책 추진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위 없이 임기 개시 → 초기 입법·예산 속도 빨라질 전망 국정과제 7~8월, 예산안 9월 확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 개편 및 인선 모니터링 정책기조와 연계된 투자·사업계획 조정 필요
노동 및 규제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4.5일제,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시장 재편 공정경제 강화로 지배구조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 리스크 사전 점검 임금체계 및 지배구조 정비 전략 수립
미래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의 세제·재정지원 집중 R&D·설비투자 중심의 정부과제 집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과제 및 인센티브 활용 전략 선제 수립 산업별 정책 수요 예측 및 R&D 투자 조기 반영
공급망 및 외교 정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 미중 갈등하 통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급선 재조정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필요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입 전략 조정

(2) 산업별 정책 분석과 대응 전략

각 산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회와 위협이 병존하는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협력 전략과 재무적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약집 보기](#)).

산업	주요 정책 변화 시사점	대응 전략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병리 장비 도입 지원, 정밀의료 R&D 인프라 구축, 공공백신 생산시설 투자 등 항목별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건보 등재 간소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조기 기획 및 정부과제 연계 임상·건보 대응 전략 고도화
AI·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투자 100조원 펀드 조성, 인프라·데이터·인재 양성 의료·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연계 투자, AI 인프라·인재 선제 확보 데이터 결합 신사업 개발, 보안·표준화 선도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강화, 상생 프로그램 운영 법제화 대비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 강화
벤처·스타트업·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확대, 규제샌드박스 적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매칭 투자 확대,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초기 스타트업 발굴·육성, 비상장 투자 강화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구조 변화 ● 공급망 안정화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혁신(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추진 ● 공급망 리스크 대응 매뉴얼화
반도체·첨단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지정 및 대규모 세액공제 예상 ● 미·중 사이 중립 외교 기반의 수출입 규제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투자계획 및 정부예산 연계 ● 수출통제 이슈 대응 체계 정비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은 산업별 특성과 정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 전략 정비 + 대정부 소통 채널 구축 + 규제 리스크 점검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 연동 기반 전략 기획** : 산업별 정부 계획과 연계된 투자·사업계획 조정
- **대정부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 부처별 정부과제·인센티브 연계 및 협업 기회 포착
- **규제 및 외교 리스크 분석 체계 고도화** : 노동, 공정경제, 공급망, 수출통제 이슈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

6. 주요 일정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2025년 6월~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전략산업 육성, 노동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 6~10월 사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정과제 발표, 예산안 제출, 국정감사 진행 등 일정이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부처별 정책 추진 방향을 조기 파악하고 각 산업군별 정부 협력·사업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기	정부 일정	정책 시나리오	기업 대응 전략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장관 청문회 ● 정부조직법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기능 재편, AI 전담 부처 신설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부처 조직변화 모니터링 ● 규제 주체 변경 리스크 사전 점검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확정 ● 부처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산업 중심 정책 확정 ● 공공과제·인센티브 방향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협력사업 참여 기획 ● 부처 간 분담 체계 확인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예산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집중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방향 분석 후 사업 계획 조정 ● 재무 시뮬레이션 및 투자계획 연동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공정경제 감사 강화 ● 산업지원사업 실효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협회 및 업계 공동 대응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입법·행정·외교·산업·통상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AI,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립적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이번 브리프와 관련해 추가 문의나 세션이 필요하신 경우 contact@thecodit.com 으로 연락주시거나, thecodit.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uthors' Contact Information

정지은 대표이사
CODIT
 contact@thecodit.com

윤채영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victoria@thecodit.com

송해영 원장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haeyoung@thecodit.com

박승민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madison@thecodit.com

전서형 연구원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stella@thecodit.com